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과제

1. 농특위 출범의 의의와 한계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채택됨으로써 이제 우리 농업의 장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갈수록 거세어져만 가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압력과 국내 농업경시세력들의 집요한 농업말살 음모속에 이미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게다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확대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도시지역에 비해 너무나도 낙후된 복지여건으로 인해 이제 농촌지역은 사람이 살기를 꺼려하는 곳으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추세라면 멀지 않는 장래에 농촌에서 더 이상 사람을 구경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암담한 현실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던 400만 농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월 26일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어서 3월 6일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출범한 것이다.

농특위의 설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닌다. 물론 농특위가 “농촌희생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수립”이라는 설립취지를 올바로 이행하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에 전격 부응하였을 때 그 의의는 더욱 클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기구로서 WTO 뉴라운드 농업 협상과 쌀 문제, 농어촌 복지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의 운명이 걸린 농정현안에 대해 범국민적 차원의 논의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특위 출범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농특위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체결 이후 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다. 아울러 농특위는 지난 1994년 UR 협상체결 이후의 한국농업의 후속대책 수립을 위해 설립되었던 자문기구 형식의 「농어촌발전위원회」보다는 법적·제도적으로 보다 진일보한 기구이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예

산·통상당국, 학계,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범정부 규모의 메머드급 위원회라는 기구 구성상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출범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 선정상의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지나치게 '구색맞추기'에 연연하다 보니 조직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미비하여 획기적인 대안 제시는 고사하고, 정권 교체 후 용두사미식으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농가소득보장과 국가 차원의 농촌복지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제 정부 농업정책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한정되었던 정책 수립은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농가가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방향은 소득보장 측면과 도시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농촌지역의 복지증진과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농특위는 경제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농촌복지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꾀하고 있어 농촌지역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00만 농민들이 농특위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3. 농특위의 성공적 운영은 예산확보에 달려 있다.

농특위가 설립 목적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뉴라운드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먼저 어떻게 국민을 움직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업과 농촌의 회생방안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쌀 재협상을 비롯한 뉴라운드 협상 대책,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경쟁력 강화와 복지 증진 등 농특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각종 정책 대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그 관건일 수밖에 없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장미빛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농특세 연장이나 특별재원 마련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농특위의 위상 정립이 관건이다.

농특위는 농정과 관련해 사상유래없는 범정부 차원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라는 점에서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기존의 수많은 정부기구처럼 그저 정부내 특별기구 중의 하나로 안주하거나, 농정현안에 대한 의례적인 심의·의결기구에 머물러서는 그 존립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분명 400만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예산당국과 통상당국,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주체들의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논의와 논쟁만 거듭하는 식의 비생산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농정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특위는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

에 의해 최단기내에 출범된 기구이다. 따라서 농특위에 참가하는 경제·통상당국과 소비자·시민단체, 학계와 전문가 그룹 등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처별 이기주의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진정한 농업회생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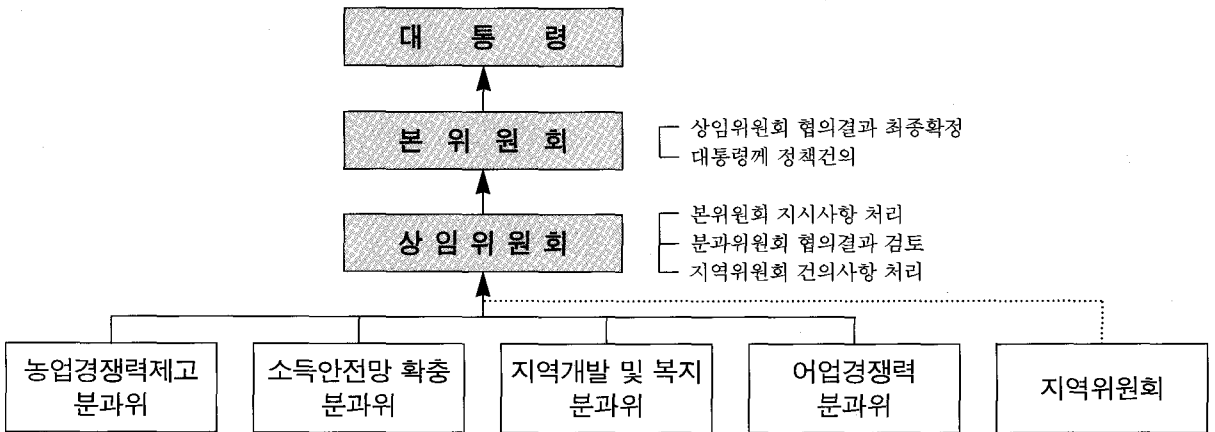
한편으로 크게 우려되는 것은 농특위가 정권 말기에 출범한 정부기구이다 보니 정치적 논리에 의해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함께, 정부내 농림부의 상대적 위치와 국

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정부내에서의 위상을 어떻게 제고할 것 인가하는 점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농특위원 다과회에 참석하여 “농특위가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를 한 내용은 현재 농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것이며, 400만 농민들이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민농연

농특위는 이렇게 구성된다

기구표



본위원회

- 한갑수 전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28인으로 구성
 - 당연위원 : 재경부·농림부·해수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 위촉위원 :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위촉
 - 농어업인단체대표(8) :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4)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대한YWCA 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전문가 및 언론인(9) :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성진근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장원석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조옥라

-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고유봉, 제주대 해양생산과학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철주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박대석 KBS 해설위원실장
- 정기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 수시 개최

- 상임위원회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농업경쟁력제고 분과위원회,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분과위원회, 농어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분과위원회,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

■ 구성방안

- 위원장(농림부차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관련부처의 1급, 농어업인 단체대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관련부처 1급 : 재경부·외통부·농림부(해수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4) :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전국농민총연맹 부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학계 및 전문가(3) : 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부원장, 해양수산개발원 홍성걸 수산연구실장,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김완배 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
 - 소비자(2)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 주요기능

- 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 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지역위원회의 건의사항 처리
-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 여론수집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 구성

2002년도 주요활동 계획(잠정)

- 2002년 상반기는 쌀산업발전 중장기대책, 농지제도 개선 등 농정현안, '03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논의
 - 쌀산업발전 중장기 대책을 위원회에 상정(3월)
 - 경쟁력 제고 분과위 및 소득안전망 확충분과위 검토(4월말)
 - 상임위원회(2회) 및 본위원회(1회)를 개최하여 확정(5월중순)
 - 관련부처의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편성 방향 보고 : 3월말
 - 분과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논의(4월말)를 거쳐 본위원회 상정(5월중순)
 - 분과위원 중심으로 지역현장을 방문 의견청취 : 3월말
- 2002년 하반기는 뉴라운드 대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수립
 - 농정의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정립(9월말)
 -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
 - WTO협상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
 -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체제 확립
 - 농어촌의 활력증대 및 도·농간 복지균형 유지
 -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12월말)
 - 중장기 투융자계획 및 재원확보 대책
- 2003~2004 : 제도개선·법제화 등 농어업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